

# 교수회의, 교수협의회의 실상과 허상

양재혁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대학은 한 사회의 바람직한 존재양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을 양성하며 연구와 교육을 기본임무로 하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기관이다. 동시에 현대의 대학은 양심의 자유에 입각한 개인의 선택의지와 그 의지의 현실적 실현을 위한 자기 결단에 토대한 노력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현실을 역사적 실체로 구성하려는 지적 각성을 촉구하고 반성케 하는 사회적 존재의 자기 주체성 확립을 돕는 개성의 신장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문제화 되었던 임시부정에서부터 대학

설립자의 자의적 전횡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게 하여 대학인의 자율적 성찰력을 압제하는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 속에서, 외국의 학문적 성과에 관한 홍보와 그 복사에만 충실한 대학인의 현실적 역사의식의 둔화는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대학이 올바른 모습 찾기의 가장 선두에서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데에 민주적인 공개행정과 연구의 자율을 위한 강한 의지를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했던 '교수회'가 독재정권의 지시를 추인하는 기구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더 시대적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대안적 기구인 '교수협의회'는 그간의 여러 가지 제약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율성에 입각한 민주적 교권의 확보와 대학 운영에서의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색"을

추구하였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올바른 사회적 위상에 따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운동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교수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수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교수회와 교수협의회의 허와 실

연구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대학 운영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80년대 중반부터 고조되었던 학내 민주화를 위한 투쟁 과정들은 일련의 변혁을 위한 역사적 의지였다. 한동안 정치의 민주화를 모색하던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이른바 문민정부에서 대학 민주화의 주체가 되었던 교수협의회는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미비함과 학칙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대학의 개혁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의 보장은 자율적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만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아직도 대학의 현실은 대학구성원의 의식, 제도, 운영에서 개선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협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리하여 대학 민주화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교수회와 교수협의회의 공식의결기구화를 통해 대학 체제를 균형있게 정비해야 한다. 셋째, 대학 운영이 공개적이며 객관적 감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요점은 군사정권 체제에서 재단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권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전체교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립해 내는 과정이었다. 그 핵심이 전체교수회에 의한 총·학장의 직선과 교수회에 주어질 수 있는 의결권의 확보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평의원회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에 대한 예·결산 심의 및 각종 규정의 심의·의결권 부여,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의 평의원 참여가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돌이켜 볼 때, 그동안 각 대학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된 총·학장 및 그 집행부서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회의적이다.

우리의 대학 행정은 자율화라는 어설픈 구호 밑에서 타율의 모범을 보이는 이율배반적 구조 속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교수회의 심의·의결권을 거부하면서 학교 운영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독재화, 이로 인한 대학 민주화의 전반적인 퇴조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많은 교수들의 타성적 무관심과 방관, 소아적 이해관계가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많은 교수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비판 그리고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이는 권위주의 정치풍토에 길들여진 전체교수회의 체제를 민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은 모든 대학인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교수회의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한 학교당국의 성의있는 태도이다. 전체교수회의 위상이나 역할을 존중하고 있다는 교육부나 사학재단의 공식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가 지속된

다면 학교 운영자와 교수, 학생, 직원 간에 불신이 싹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심화되는 갈등은 결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손실을 낳을 것이다.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가치기준에 대한 철저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기준을 합의하는 신속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학내기구는 교수회 혹은 교수협의회이다. 각 대학마다 나름의 실천방안을 찾아내고자 교수회 내지 교수협의회를 두고 저마다의 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행하여 왔는데, 대체로 교수회의 의결권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대학이 공식기구로 하고 있는 교수회의에서 대학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그 기능이 한갓 총장의 자문기구 역할로 존속되어 왔다는 점에 기인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수협의회조차 학칙상의 규제 때문에 임의의 단체로 규정되어 제반문제에 대한 건설적 비판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각 대학은 학내의 민주적 학사운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수회 내지 교수협의회 그리고 평의회 등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문제는 교수회의 기본목적은 소멸되고 비민주적 양태만이 그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회는 실제로 학칙에서도 공식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 문제의 심의·의결에서부터 그 실행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권을 행사해야 할 독립기구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상식적인 기능이 확보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교수회의 기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교수회에서 교수의 자유로운 연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수는 학내의 주체이면서도 교수회에서만

큼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염려하여 정의를 주장할 수 없는 허구적 실체기구일 뿐이다. 그것은 독재체제에서 교수회가 학내의 제반 문제를 토론할 수 없는 어용기구였으며, 심지어는 결과 보고만을 듣고 추인하는 허구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수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구이다. 하지만 총장의 자문기구로서만 존재하며, 독재적 관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용화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많은 교수들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일부 대학은 교수회의 비민주적 독재기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협의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소수의 임의기구라는 난점은 있으나, 적극적이며 진보적인 운동체의 성격으로서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협의체이다. 더욱이 공식기구인 교수회가 합리적 비판을 통한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수협의회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교수회가 학칙개정에 의해 의결기구화되고 그 위상을 회복하며,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면, 교수협의회는 교수회로 흡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제반 문제에 관한 민주적 비판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는 실제 기능은, 공식적이면서도 제도적 약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수회의 기능 상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는 대학인 집단은 다른 사회조직이나 집단과는 달리 학문을 통해 습득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자기결단을 추구하는 지적 공동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대학에서 추구하는 학문은 어떤 교조적 이념이나 신앙에 입각한 절대

적 가치가 아닌, 다양한 현실적 삶의 경험을 통해 개별성을 넘어 보편성으로 포괄된다. 이와 같이 객관적 지적 판단의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특정의 가치나 이념의 절대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인식하려 하는 가치자유의 토대를 중요한 지적 활동의 윤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서부터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어 왔고, 또 그 때문에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일정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은 일제하 식민지 시대부터 특정 지배세력의 사회적 지배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 토대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지배이념의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기구로 기능화되어 본연의 가치자유에 입각한 비판적 인식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풍조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대학은 이미 선진국에서 그 나라의 발전에 기능적으로 작용했던 지식만을 모방하거나 전달하는 데 만족했으며, 또 독재체제에 기회주의적으로 자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독재이념을 국가의 이름으로 인내하도록 강요했으며, 대중의 지지를 잃은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과 지배세력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대학 운영자의 기회주의적 신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독재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던 일부 진보적 학생층이나 교수들을 체제전복이라는 죄명으로 대학에서부터 추방하는 사태로도 발전하였다.

이른바 문민정부의 탄생은 먼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교권의 자기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대학 내에서 자연스럽게 낳게 하였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그간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수라는 신분과 권위에 만족하는 다수의 보수적 집단체 때문에 그 본연의 사회적 비판기능은 쇠퇴하

고, 오히려 대학이 보수적 권위주의자들의 집합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탄에 일부 진보적 교수들은 새로운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국에 걸쳐 실행되고 있는 대학들의 교수협의회 조직화와 활성화는 바로 이러한 한국 대학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교수협의회는 직업으로서 학문을 추구하는 교수들의 정당한 권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인 단체이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학내·외 활동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다.

교수협의회는 최소한 그 출발부터 정권적 지배이념의 재생산이나 전파자로서 대학인의 역할을 거부하고 실추된 민주교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로부터 적어도 교수협의회는 독재체제의 정치·경제 및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대학 본연의 연구와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첫째 임무로 삼아왔다. 이것은 자연히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요구와 개방적인 의견수렴과정의 보편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교권보호단체의 형성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 대학인으로서의 본연의 자기 각성이 준비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편협한 판단을 조직의 힘을 빌려 강제하려는 특정 집단의 세력화로 이어져 대학 내에 파벌을 조성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적어도 대학인으로서 교수들의 진보적 권익 보호단체로서의 교수협의회는 단순한 교권보호의 차원을 넘어 가치자유에 근거한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교수협의회는 학자로서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대학 공동체의 합리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려는 태도로 충만한 지식인의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마땅히 학내 최고의 의결기구이어야 하는데, 실상 협의의 수준에도 못 미치며, 다만 총장의 자문기구 역할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보다 나은 내일에의 약속과 민주적 발전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에 의한 의견수렴과 결의가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수준에서 총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더욱이 총장이 교수회를 소집하고 있다는 점과 1년에 두 번의 정기회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나마도 학사보고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현 상황에서 항상 주요 안건들이 상정조차 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학문의 전당이요, 민족의 앞날에 커다란 밑바탕이 될 대학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의 모색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고치고, 나아가 대학의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대학들은 교수들 임의의 모임으로서 교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우선적인 과업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한편,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모색 그리고 교수회의가 자문기구의 수준을 넘지 못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비민주적 행정과 교권 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교수회는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연한 기구인데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한낱 총장의 자문기구화, 정기회의 연 2회, 그 또한 총장의 소집에 의해야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수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참여와 불참문제로 더욱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수회의가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실제적 원인은 제도의 모순을 지적할 때

불이익이 온다는 타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3. 교수협의회의 역할

오늘의 모든 대학들이 올바른 대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수회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대학의 교수회가 총·학장의 선출권과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협의회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교수협의회가 탄생하는 데 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던 대학인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온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대학의 민주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협의회가 대학 개혁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다수가 수동적 자세이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중점 추진사업도 변경되어 왔다. 초창기  $\sim$  일부 대학에서는 70년대 초에 결성되기도 했지만 실제적 확산은 80년대 후기에 나타났다  $\sim$  이는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그 후에는 주로 교수들의 재임명과 관계된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UR 개방과 그 밖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의해서 교육계는 커다란 가치관의 변화 속에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혁신적인 개혁을 위한 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가 몇 주 후에는 백지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진보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가 개방의 시대를 맞고 있어 이제는 대학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학문의 자율성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타성적 자만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수들 스스로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회의 민주화와 대학 발전의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교수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교수의 임무가 학생교육, 학문연구 및 전문활동에 있다면, 교수들의 학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학문연구의 성과가 확대되며, 사회적 전문활동이 활발해질 때 대학의 발전은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수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회가 진정으로 대학 발전을 이룩하고 교수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질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는 진보적 운동체의 역할로써 매개해야만 한다.

둘째,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학사행정에 반영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부터 우리의 교육계는 여러 면에서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일부 교수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반면, 많은 교수들은 무관심 내지는 방관으로 일관하여 왔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교수회를 개

혁하자는 실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느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며, 대학 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적절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교수협의회는 진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교수협의회는 스스로의 합리적 절차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회원들이 가지는 민주적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때만이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상황에 부합되는 교수협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학민주화의 구축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활성화되고 능동적인 새로운 회원의 가입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정관을 규정하는 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은 80년대 후반 민주화 열기 속에서 민주적 대학을 열망하며, 사립학교의 비민주 법안을 새로운 정관으로 규정하고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직선 총·학장을 선출한 바 있다.

현재의 교수회가 명실상부한 대학 발전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교수회의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법령이나 대학의 학칙에는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 - 자문역할 - 에서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교수회의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교수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여 임명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의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학행정사무처와 교수회의 관계는 권위주의 시대의 불합리한 상태로 남아 있다. 때문에 교수회가 대학의 모든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넷째, 교수협의회는 소수 교수들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합리적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 교수협의회는 제도적으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단체이며 단지 진보적 운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협의회가 진보적 의사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들의 호응이 있어야 이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전체 교수회의 합리성은 성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 다음에 교수협의회는 해산되어 마땅할 것이다.

다섯째, 교수협의회는 본질적으로 대학 민주화와 진보성이라는 양대정신을 그 지주로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학칙상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화 물결과 함께 대학 사회에 진보적 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수협의회는 아직도 자발적 임의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또 그 기구를 통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총·학장을 선출하는 실제적인 기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대학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학의 제문제에 대한 교수 의견의 대변, 알권리에 대한 요청, 교풍과 학풍쇄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교수들의 권익옹호 사항에 대한 정당한 요구도 교수협의회의 몫이다. 협의회가 회원간의 친목이나 어느 주어진 형식을 추종하기 위한 구성체가 아닌 이상 현안에 반드시 비판적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 4. 교수회와 교수협의회가 나아갈 방향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형상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화의 실체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기층조직의 자율성이 더 중시되어야 할 민주사회가 지도층 의사의 절대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형을 여전히 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공통된 현상이고,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아직도 민주적 절차를 거친 의견의 수렴에 미숙하고 온갖 권위의 독재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더욱 요구된다. 오늘에도 일부 대학에 봉건적 경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권위와 비민주적 현상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는 더 한층 개혁의 긴요성을 느낀다.

교수협의회의 활동은 여타 이익단체의 목적과는 달리,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효용성 원리에 따라 조직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운동이다. 때문에 다양한 견해와 관점의 개방을 통해 가치합리성에 충실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대학의 진보적 위상정립에 일관되게 헌신하는 합리적 담론의 장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교육부나 재단의 하달식 학사 운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수회의를 형식상 소집한다 해도 전달 위주의 회의방식을 답습하여 왔다. 그러므로 교수협의회는 대학 내의 공식기구가 아니지만, 기존의 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해 언제나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결정에 대해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화될 수 있는 논리를 따지는 데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항상 견지될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운동체이다.

이와 같은 운동체를 매개로 하여 교수회의 학내 최고의결기구화는 대학 민주화의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성취는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대학의 자율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은 의결기구화이다. 권력의 분산이라는 민주제도에서 그 역할의 중대함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대학은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前衛이다. 그럼에도 대학은 여전히 독재적인 경향 아래, 특히 일부 보수적 성향의 교수들의 경우 스스로의 자율성마저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전체교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민주화의 질서를 제정립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질적 단계를 높이는 보다 중요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자기비판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교수협의회는 독재정권의 제도권 아래 어용화된 교수회의 분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조직된 운동단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학의 비민주적 행정실태를 바로잡고 교수회의 퇴색된 운영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진보적 힘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그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올바른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향의 요체는 민주화를 위한 당위적인 문제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당

위적인 문제의 제기와 그 해결을 위하여 교수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수회의 의결기구화이다. 아직도 각 대학에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이 총·학장에게만 있고 교수회나 교무회의 등의 모든 회의체들은 형식적인 요식절차 내지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상태이다. 또한 교육법과 사립대학법에 평의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발적인 교수 대표기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회가 의결기구화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는 운동해야만 한다.

둘째, 교수회의 대의기구인 평의회의 실행이다. 80년대 민주화의 물결에 의하여 대학 사회에 평의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대학마다의 특성상 모든 대학에 걸쳐 실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평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동안 군사문화의 권위주의에 억눌려 왔던 대학문화의 위상을 민주화에 걸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과 정열을 나름대로 쏟아 왔다.

그런데 평의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평의회 의원 선출이 각 단과대학 학장이 선발하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적 한계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나마 평의원들이 합의한 사안들, 즉 교수들의 복지문제,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법, 그 밖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비롯되는 제반문제 등등을 재단이나 학교 행정처에 건의를 해왔으나 학사행정처와의 견해 차이로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평의회의 실행 자체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민주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선출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게 될 것이다.

셋째, 교수회의 민주적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진보적 운동의 성격을 갖는 교수협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칙상의 공식기구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수협의회 결성과 행·재정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의 제반 인사행정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② 대학 재정은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교수·연구활동 지원과 연구소의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④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수 권익의 신장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⑤ 일반 학사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교수회 - 내지 교수협의회 - 의 의결기구화 및 학칙에 의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개 대학에서는 교수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교수회로 운영하면서 교수회의 회장도 총장이나 학장의 당연직이 아니라 교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⑦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참여와 선출에 의한 평의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교수평의회는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대개는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과 교무·학생·기획처실장으로 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각 단대는 평의원 선출·추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평의원들의 의욕 또한 낮게 보이며, 교수회 및 학장회의와 역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⑧ 교수회와 교수평의회 대의기구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⑨ 교수협의회의 적절한 제도적 위상은 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초적 방향모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수회가 학내 최고의 결기구로 되고 진보적 대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독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는 기구로서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대학 운영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 운영의 모든 주요사항에 대한 결권을 가진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만 한다.

① 학내 기본 정책의 심의·의결

② 학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③ 예산안의 동의와 결산의 감사

④ 총장의 선출과 불신임

⑤ 교수회장단의 선출과 불신임

⑥ 학장회의 구성원의 임면 동의

## 5. 교수회 및 교수협의회의 위상 정립문제

대학은 점차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쟁과 변혁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동·서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함께 신제국주의 경향이 대두되면서 경제 우선주의가 지역간에 최대 목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지역감정과 민주화, 민족통일 그리고 새로운 기술개발 등 민족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대학의 외부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은 민족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화 시대의 능동적 준비 그리고 인재양성과 사회봉사 등의 역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 무지와 폭력에 의해 인간성을 상실하였던 위기상황이나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이나 불굴의 의지로 역사발전을 선도하는 산실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의 기본적 역할론은 우리 연구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진보적인 노력으

로 나아가야 할 지표가 될 것이다.

현실의 대학 실태는 정작 대학의 주체인 교수를 관심의 영역 밖에 놓아 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지식인은 억압과 단순기능인으로 강요되었으며, 교육자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탄압하던 폭력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대학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학의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 우리의 지난 현실을 돌이켜 보자. 부정과 불의에 분연히 일어나 참과 거짓을 밝혀야 함에도 우리의 행위는 침묵과 함구로 일관되어 불의와 폭력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지 않았던가.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교수회가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교수의 진보적 자기비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회는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교수회는 평교수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수회의 조직과 기구를 합리적으로 가동하여 대학 발전에 참여하면서, 대학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교수의 자발적 참여의식인 것이다. 교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이 낳은 결과이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는 민주적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교수회 혹은 교수협의회 체제인가, 평의회 체제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절실한 것은 진보적 비판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며 구성원들의 단합이 첫번째 문제이다. 직선방식으로 선출된 총장이나 학장을 통해서도 아직 대학 민주화의 외형만을 좇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무관심이 그 첫째 원인이며, 이러한 상태라면 견제를 통한 균형이라는 민주적 역할은 실현될 수 없는 것

이다.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 및 교수의 권익에 기초하여 학교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학의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교수회와 교수협의회의 본래 목적이다.

학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한데 참여하여 대학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할 이상이다. 의사의 집행은 대학 행정을 책임맡아 수행해야 하는 총장의 권한이지만, 총장의 이 권한이 원활하고 민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총장은 대학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인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적인 결정과 집행은 권위와 독단에 의해서 실천될 수 없다. 때문에 그 기능과 책임에서 총장과 교수회의 역할 분담을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수회의 위상 정립 및 심의·의결권 확보는 교수회 전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공동체의식의 제고와 대학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는 능동적 의지를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합리화하고 자율화하기 위해서 학칙을 개정하며, 나아가 학생과 학교,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대학의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학이 국가 사회의 요청에 자신있게 부응할 수 있고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수사회가 안고 있는 폐쇄성과 보수성을 하루속히 탈피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교수·학생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평가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도 안 될 것인 바, 교수회는 대학 내부

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심체가 되어 민주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권과 민주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다.

## 6. 맺음말

교수협의회는 분명히 대학인의 자발적인 운동체이다. 교수협의회는 교권의 부당한 침해나 간섭에 맞섬은 물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기획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수들의 협의체로 발전해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교수회의 민주적 발전에 따라 스스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단체이다.

무엇보다 교수회의 민주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 행정이 총장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듯이, 대학에서의 합리적 결실들은 교수회의 의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총장을 비롯한 행정 집행처에서도 인정할 때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

---

양재혁/성균관대 동양철학과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칼스루헤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교협 조국통일위원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장자와 모택동의 변증법』 등이 있고, 『현대사회와 가족윤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